

치매관리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은성호 | 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최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치매 환자 수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계청의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통계 집계(1949년)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총인구가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70여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2). 치매 환자는 2016년 66만 명에서 2030년 136만 명, 2050년 30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2016).

그간 정부는 이러한 인구 구조 및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치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 환자 돌봄 문제를 환자와 그 가족의 힘들고 고단한 부담으로 국한하지 않고 정부와 지역 사회가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다양한 치매정책을 추진해 왔다.

첫째, 2019년 12월 전국 시·군·구별로 치매안심센터 256곳을 설치하여 치매 노인과 그 가족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 단기쉼터와 가족 카페를 마련하여 경증 치매 노인을 보호하고 증상 악화를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둘째,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매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였다. 치매안심마을은 2021년 기준 64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 및 인식 개선 활동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치매파트너 약 125만 명(2021년 기준)을 양성하였다.

셋째, 장기요양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18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등급 체계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하였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시행으로, 2021년 12월 기준 8만여 명의 중증 치매 환자가 혜택을 받았다.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치매 환자의 전문 치료·관리를 위해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2017년 10월부터 공립요양병원에 행동심리증상(폭력, 망상 등) 치매 환자 집중 치료를 위한 치매전문병동 57개소를 설치(2022년 8월 기준)하였다. 이 중 「치매관리법」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한 9개 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치매가 발병하더라도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편안한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치매관리 체계를 내실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 노인에 대한 가족 부양이 감소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치매관리정책도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무엇보다 전국 단위로 설치한 치매안심센터를 명실공히 지역사회의 치매관리 허브 기관으로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정부에서는 치매 환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에 대

한 전반적인 운영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사·분석하고 의료계, 학계, 돌봄·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치매돌봄서비스 개선 협의체'를 2022년 8월부터 운영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및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의 개별 상황에 맞는 각종 서비스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연계·제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배치된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이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 내에 사례관리전담팀을 신설하는 과제도 담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 발굴(검진)에 대해서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 고도화를 추진하여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른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자료 연계(2022년 4월)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치매 환자의 기본 정보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로, 치매안심마을을 확대·발전을 통한 치매친화사회 조성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려 한다. 치매에 걸리더라도 원래 살던 곳, 친근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함께 사는 이웃의 이해와 안심할 수 있

는 주변 환경이 중요할 것이다.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따뜻한 도움을 주는 치매파트너 양성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치매파트너의 다양한 역할도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치매파트너는 치매 환자의 말벗, 친구가 되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치매안심센터,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치매 환자 실종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로, 치매 환자의 중증도와 필요도에 따라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가 통합·연계되도록 지역사회 치매의료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돌봄취약계층(예: 독거 치매 노인 등)의 지속적인 치료 유지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의료 자원과 연계·협력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폭력성과 환각 등 행동심리증상이 심한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치매안심병원과 연계하여 조기 치료를 한 후 치매안심센터와의 퇴원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단위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치매관리 사업을 기획,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다. 매년 전국 지자체(치매안심센터, 광역치매센터)를 대상

으로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12월)하여 지자체의 우수 사업을 평가하고 전파함으로써 치매관리 사업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올해 9월 21일 거행된 제15회 치매 극복의 날 슬로건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치매친화 사회”였다. 정부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아픔과 돌봄 부담을 줄이고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앞으로 치매돌봄서비스가 강화되도록 치매관리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참고문헌

통계청. (2022. 7.).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2016). 2016년 치매역학조사.